자활읽기

Central Self-Sufficiency Foundation ● Winter 2008

창간호

기획좌담 _ 2008, 자활을 논하다
자활동향 _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세계의 근로연계복지 현장을 가다
특집 _ 중앙자활센터에 바란다
네트워크 _ 마이크로크레딧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땀 흘리는 손에는 '희망꽃'이 핍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손'이 있습니다.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한 손, 화려한 색상의 매니큐어로 치장한 손…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웃들의 손은 너무나도 평범하죠.
보석 대신 굳은살이 박히고,
일을 하다 다친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하루 종일 다리미를 놓지 않아 손바닥이 무르기도 하고,
수십 대의 체인을 고치느라
기름때가 가실 날이 없는 손.
그래서 참, 볼품없는 '손'입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다는 기쁨, 그 하나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 되고 이들이 흘리는 땀은
미래를 가꾸는 거름이 됩니다.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를 쓰러뜨린다고 합니다.
땀 흘리는 손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꽃'이 핍니다.



Contents

Photo Essay 땀 흘리는 손에는 '희망꽃'이 핍니다

희망과 전환
2_ 발간사 중앙자활센터 이선우 원장
4_ 축사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병학 회장
6_ 기획좌담회 2008, 자활을 논하다

논단과 흐름
12_ 자활동향 정책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16_ 자활동향 이슈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18_ 자활동향 해외 세계의 근로연계복지 현장을 가다
24_ 자활포럼 자활, 지난 10년의 성과와 미래비전

현장과 공감
26_ 특집 중앙자활센터에 바란다
30_ 현장 포커스 2008 전국자활연수대회, 소통과 나눔으로 더 행복한 자활세상
34_ 네트워크 마이크로크레딧, 빈곤층의 자립의지 북돋우는 '착한' 대출
38_ 현장 소식 중앙 · 광역자활센터 소식
40_ 알림 전국 자활센터 연락처

Cover story

Photo _ 오우석
땀 흘리는 손에는 '희망꽃'이 핍니다



(재)중앙자활센터 저널 〈자활읽기〉 창간호 **발행일** 2008년 12월 29일 **발행인** 이선우 **발행처** (재)중앙자활센터
T. 02)3415-6900 F. 02)3415-6990 www.cssf.or.kr **편집 · 디자인 · 제작** (주)코리아프린테크 T. 02)2264-3325

자활사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론의 장이 될 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를 포함한 전체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하게 되면서 빈곤층의 근로동기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활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8년이 지났습니다.

더불어 자활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여 수급자의 위치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자활사업은 참여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적극적 노력과 땀의 결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활대상자의 근로동기를 향상시키고, 직업능력을 배양하면서 이들에게 소득보장을 제공하고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활제도의 목적 중에서 탈수급에만 초점이 집중되면서 일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활대상자인 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근로유인책이 부족하고, 자활사업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자활사업은 수급자를 넘어서서 대상계층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경쟁이 심화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제도도 빈곤층에게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기보다는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자활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나로서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활사업은 지금까지의 방향에서 큰 변화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 8년의 자활사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자활사업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로이 정립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활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자활사업의 성과와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인 논의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자활사업은 많은 연구자들을 자활로 끌어들이는데 실패하였고, 결과적으로 자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이 이루어 온 지금까지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자활사업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데 일조하고자 출발하였습니다.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을 효율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이미 자활사업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중앙자활센터에 대해 많은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가 기대와 함께 우려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의 지금까지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노력을 더 효율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자활사업의 자료를 생산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자활읽기〉는 중앙자활센터의 이러한 노력을 보여드리는 장입니다. 〈자활읽기〉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널리 알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자활읽기〉는 연구자들에게 자활사업의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자활사업 자료 뿐 아니라 외국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자활의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상황에 맞게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여 자활사업을 향상시키고,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읽기〉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토론의 장입니다. 자활사업의 참여자와 종사자, 연구자와 정책당국,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자활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자활사업을 새로이 열어갈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읽기〉 창간호를 준비하면서 좌담회에 참석해 주시고, 원고를 투고해 주신 전문가 및 연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활읽기〉가 출판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자활사업 종사자 및 참여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중앙자활센터의 설립과 함께 〈자활읽기〉가 발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읽기〉가 발간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성과관리팀을 포함한 중앙자활센터의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2월

중앙자활센터 원장 이선우

국민들과 참여자 및 종사자,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소통하는 통로가 되길 바라며…



근로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시행되었던 자활사업이 지역 곳곳에 뿌리를 내린 지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쁨과 그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희망을 엿보며 자활현장은 쉼 없이 하루하루를 뛰어왔습니다.

초기의 사업프로그램 미비, 참여자와의 미숙한 연계 등 사업수행상의 어려움들이 정리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포괄하며 수요자 중심으로의 프로그램 정비 및 성과관리를 통해 진정한 복지로 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활사업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의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그 여파를 받게 될 근로빈곤층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활영역은 또 다른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앙자활센터의 발족에 따라 광역·지역자활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는 만들어졌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체계는 이제 겨우 준비단계를 벗어났습니다. 자활사업의 성과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및 전문가와의 공론과정, 그리고 다양한 수행기관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 등 아직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자활지원제도는 IMF 국제금융위기 시기의 역동적 역할을 포함하여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보강역할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요구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대응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빈곤의 진입을 차단하는 예방적 기능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도 내년에는 이러한 빈곤탈출과 진입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현장과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자활센터의 〈자활읽기〉 출간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자활사업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모델 제시 등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적 관찰력과 경험을 통한 통찰력을 통해 중요한 내용을 저널에 담아 국민들과 참여자 및 종사자, 사회복지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장과 전문가, 정부의 지면상 공론장으로써의 적극적인 확대를 기대하며 〈자활읽기〉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8년 12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재희

현장과 더불어 호흡하는 저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드디어 중앙자활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꽤나 어려운 산고를 겪으며 맺은 결실입니다. 그동안 지역자활센터는 242개로 늘어났고, 광역자활센터도 6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자활사업의 성과가 녹아 들어가 있음에도, 새로 시작하는 중앙자활센터는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그렇기에 중앙자활센터 사무실에 들르면 활력이 느껴집니다. 일하는 분들 각각의 얼굴에도 생기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중앙자활센터가 발간하는 저널 〈자활읽기〉는 특히 2009년 새해에 세상에 선을 보이니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지난 2000년을 떠올려 봅니다.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자활사업이 이 땅의 빈곤주민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제도가 지닌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자활사업은 성과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속에서도 이 땅의 빈곤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복지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자활사업 10년을 돌아보며 또 다른 희망을 꿈꿔 봅니다. 그 꿈은 중앙과 광역, 그리고 현장이 함께 꾸는 꿈이기에 든든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자활센터가 설치목적에 밝히고 있는 대로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평가, 민간자원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활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원업무를 전담한다면 자활사업 지원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사족처럼 덧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 보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먼 여행이 또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실천입니다. 현장입니다.

모쪼록 중앙자활센터와 센터에서 발간하는 저널 〈자활읽기〉가 머리와 가슴을 잇고, 가슴과 발을 잇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현장과 더불어 호흡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저널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008년 12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이병학

2008, 자활을 논하다

한국사회의 빈곤문제와 자활의 방향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돌아보고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앙자활센터 주최로 지난 12월 중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학계와 정부, 그리고 자활현장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사회 | 이선우 중앙자활센터 원장, **서광국**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팀장
대담 | 구인회 서울대 교수,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명호** 한국도시연구소장, **이병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조충현**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투자과 사무관,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학 회장


신명호 소장


김미곤 연구위원

양적 성장, 그러나 진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했다

사회자 |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산업 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03년 이후 임금구조라든가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워킹 푸어(working poor), 즉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노동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해왔던 자활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이에 따른 정책 흐름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좌담회를 갖게 되었다. 먼저, IMF 시기부터 진행해왔던 여러 정책들이 한국사회의 빈곤문제에 얼마나 적절한 대응을 해왔는지 돌아보고자 한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 |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부분 있어왔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나 빈곤층 증대 등의 현상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빈곤층 증대의 문제는 단순히 양적 증대만이 아니라, '근로빈곤층'의 급증이라는 구성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빈곤정책의 대상이 주로 노동력이 미약한 여성이나 중·고령자 등 전통적 빈곤층에 머물고 있는 것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명호 **한국도시연구소장** |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중심이슈가 되지 못했던 빈곤문제가 부각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시도가 이뤄졌다. 그것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 노력의 시간을 통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사회가 빈곤문제를 풀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로 정부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수급 빈곤층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놓았지만, 참여정부에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현 정부와 문제해결의 고리를 이어가지 못했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제도의 변화를 꼽으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지원사업의 제도화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빈곤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만큼 커다란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제도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 제도의 확장이나 변화 없이 2000년대 이후 정책의 기조가 유지돼 온 상황이다.

이병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 7개로 출발한 지역자활센터가 현재 242개가 되었으니, 그동안 자활사업이 양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성과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하지만, 성과에 대한 비판은 많았던 것에 비해 자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는 불충분했다는 것이 아쉽다.

자활의 다중적 개념 분명히 해야 할 때


황덕순 연구위원

사회자 | 지금까지 한국의 빈곤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민사회의 원동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안에서 차별성을 두고 시작한 게 유일하게 자활사업이었다. 이 자활사업이 그동안 빈곤탈출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담당해왔는지 되짚어 봐야할 시점이 온 것 같다.

황덕순 **연구위원** |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들어오게 된 이유 가운데는 근로빈곤층에게 평균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로서의 의의가 가장 클 것이다.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규제로서 의의가 있다. 자활사업제도가 없었다면 근로빈곤층에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회세력들에게 끊임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존립이 끊임없이 위협당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존립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회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자활의 고유 역할인 빈곤계층의 탈수급을 촉진하고 자활로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와 같은 제도적 스킬(skill)로는 안 된다.

구인회 **교수** | 자활사업의 의의 가운데 '준공공 고용처' 로의 성격이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준공공 고용의 대상이 대부분 여성이나 중 · 고령층의 노인가구 위주였다. 공공근로를 통해 자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인적 구성이나 제도적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신명호 **소장** | 자활지원제도가 근로능력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한 사회적 타협으로 불가피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런데 공공부조적 성격이 강하게 존재함에도 타이틀은 '자활사업' 이다. 형식과 내용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자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실패한 제도라고 매도당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자활사업의 목표 가운데 공공부조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명시해야 한다. 실제로 자활에 부적합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자활 참여자로 넣고, 그것으로 탈수급율을 계산해내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내는 방식의 평가를 그동안 아무도 막아내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워크 페어(work fare)' 하면 자활사업을 등치시킨다. 그 안에는 소득보장 기능이 강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자활사업 참여자 중 근로능력유지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반 수 이상이다. 원래의 워크페어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시장 진입을 돕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는 사람들은 워크 페어가 갖고 있는 본연의 프로그램 속에서의 인풋(input)은 전혀 시도되지 않고, 하나의 일자리를 얻는 것에 그치고 만다. 그런 불일치가 자활을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구인회 교수 | 자활사업의 기능에는 크게 기초보장제도의 보완과 공공일자리를 통해 자활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 문제는 그간의 자활사업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는 것이다. 자활사업의 기존 기능은 유지하되 다른 약화됐던 기능을 되살려서 사회적인 기대와 일치되도록 회복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구인회 교수


이선우 원장

이선우 **원장** | 자활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딜레마가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만약 이게 조건부과였다면 확대를 하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잘 유지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공공근로의 대안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앞서 하신 말씀들이 결국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한계에서 오는 같은 고민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미곤 **연구위원** | 자활 개념의 다중성에서 오는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무조건 탈수급, 탈빈곤, 완전 자립까지 가야된다고 보는 시각을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조건부수급자로 일하는 것도 충분한 자활이 된다고 개념 정리를 해야 한다.

이병학 **회장** | 자활 내부에서는 자활근로에서 공공근로를 나가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 그럼에도 유리한 성과지표를 갖기 위해 계속 해 오다보니 자활사업의 목표나 방향에 대해 생산적이고 깊은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흘러가는 걸 보면 제도나 논의를 훨씬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는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에서는 손에 꼽히는 일자리 창출 창구이다. 자활이 빠지면 수많은 수급자를 포함한 실직 빈곤층이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된다.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지역사회에서 자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과제나 전망에 비추어 구체화시킬지 고민이 되어야 한다.

자활 고유의 역할을 위한 제도적 개편 필요

사회자 | 그동안 공공근로의 보완 프로그램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나왔으나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 현재는 법률 개편과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충현 사무관에게 정부의 제도 개편 노력과 계획 등에 대해 듣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

조충현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투자과 사무관** | 자활사업 예산규모는 마이크로크레딧이 올해 20억 원이었는데 130억 원으로 늘었고,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예산이 55억 원으로 협의가 되었다. 자활급여법은 지난해 8월 이미 의원발의를 한 바 있다. 또한 18대 국회에서도 자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현재 의원 발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법안에 기존 자활급여법(안)이 담지 못한 많은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자활급여법이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성과관련 시범사업 등 다각적인 시범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창업분야의 지원책인 마이크로크레딧의 대상 범위를 개인창업까지 확대하여 창업과 취업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미곤 **연구위원** | 자활급여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현 법체계 속에서도 불가능할거라 생각지 않는다. 국민기초보장제도에 차상위 자활참여자를 확대하면서 제도설계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활급여법 제정 없이 현 법체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혼' 을 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자활급여법은 얼마간 잘

굴러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것을 항구적으로 용인할 지 의문이다.

구인회 **교수** | 그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현재 법과 자활제도 개편의 내용이 기존의 문제점을 제대로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짚고 싶은 것은 자활사업의 대상이 대부분 여성이나 중 · 고령자였기 때문에 자활을 원활히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활의 경로도 자활공동체로 편향돼 있어서 성공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경로를 기본 모델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법과 제도개편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황덕순 **연구위원** | 자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걸 해야 할 시기이다. 세계적으로 봐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던 시기는 위기의 때였다.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은 결국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정립돼 왔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상당수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제도화되거나 내용을 충실하게 다지는 과정을 거쳤다. 지금 우리사회에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이 다시한번 사회복지제도의 비약과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활사업과 근로빈곤계층의 고용지원 문제를 기초보장제도에 묶어 놓은 자활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늘리냐 줄이냐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의 대상자를 놓고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놓더라도 자활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건 누구나 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격적으로 태클을 걸어야 한다. 자활을 기초보장제도에 묶으려 하지 말고, 다른 제도를 만들고, 기초보장제도에는 조건부수급이라는 의미로서의 자활 정도만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한다.

자활, 우리사회의 미래비전과 더불어 고민해야

황덕순 **연구위원** | 현 한국사회에 상당히 심각한 위기 징후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모델의 위기이다. 고용지표로 보면 외환위기 이후 고용률 60%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도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정체 상태다. 현재와 같은 고용률의 정체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정체 현상을 안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경제와 사회모델의 근본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산업 · 소득구조의 양극화 심화 현상을 극복할 아무런 대안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아주 빠르게 극복했는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은 선진국들의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급증했던 것과 IT 붐을 통해 내수와 수출시장에 급격한 양적 팽창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 백억 달러씩 무역 흑자를 내면서 극복은 했지만, 결국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다.
이는 복지모델에 있어서의 작동장애와도 결합돼 있다. 단순히 사회서비스만으로 돌파구가 열릴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사회서비스는 아무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해도 속도를 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서광국 팀장


조충현 사무관

우리사회의 현재 경제위기에는 돌파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장기적인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위기는 그것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것을 극복할 대안적인 사회경제모델에 대한 천착 없이는 이 위기로부터 헤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경제위기는 1년 내에 극복될 수 있는 단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시기를 지나서도 지속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경제모델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영역에서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구인회 **교수** | 고용불안정층이 양산되는 시기에 실업급여 시스템으로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생계급여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든지, 욕구별 개별급여 등을 현재의 기초보장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이것을 자활급여와 연계시키는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위기라는 상황에서 크게 한판 벌이는 것이다. 자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황덕순 **연구위원** | 공감한다. 지난 외환위기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이다. 그것은 우리사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관련지어 보더라도 옳았다.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방향은 옳았다. 지금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려면 우리사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관련지어서 고민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제도의 기초를 놓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간의 자활사업 경험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자활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우리사회에 비어있는 것은 무엇이고, 투자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성과가 날 수 있을지 등 모델 가능성이 있는 성공사례들을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었다. 거기에서 발전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정부가 집계한 사회적 일자리가 20만개다. 이 일자리는 공공근로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고리를 정부가 얘기하는 '그린 잡(Green Job)'에서 찾아야 된다. 그동안 생각해왔던 대안적인 환경친화적 모델로서 '그린 이코노미'와 '그린 잡'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팽창시킬 수 있는 계기로 가져가야된다.
또, 농어촌지역에 자활일자리가 왜 중요한지 되짚어 봐야한다. 농어촌지역이 인구는 적지만, 광범위한 우리 국토를 차지하는 곳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에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을 포함한 재생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자활공동체를 더 확장해서 커뮤니티 자체가 자활할 수 있는 공동체로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해 간다면 아이티 붐에 비견될 만한 그린 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할 길이 보일 것이다.

구인회 **교수** | 그동안 사회적 일자리의 대부분은 사회서비스였다. 다가오는 시기에 실직할 대상과 제공해야 될 일자리가 매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대상을 고려한 일자리와 고용알선, 취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황 연구위원이 말한 커뮤니티를 복지 인프라로 구축하는 방안 등은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같이 많은 경험을 축적한 집단이 현재의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서비스 제공이나 일자리 창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근로빈곤층에 대한 서비스를 총괄하고, 지자체가 힘을 보태는 식으로 나가야 한다.

사회자 | 복지모델에 대한 접근 방향, 현 제도 내에서 윈윈(win-win)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김미곤 연구위원님, 황덕순 연구위원님이나 구인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제3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중앙자활센터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이병학 회장님이 말씀하신 지역복지력 강화부분도 다양한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잘 접합해서 지역자활센터와 중앙자활센터의 역할을 고민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지금의 냉정한 평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 나아가 그동안 축적된 자활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와 개선방안,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앙자활센터의 발전적 앞날을 바라며…

구인회 지역자활센터와 협회와의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여기에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모색이 이뤄져야 향후 지자체와도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미곤 경제 위기 속에서 중앙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자활사업의 발전적인 모색을 기대한다.

신명호 별도로 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협회가 하기 어려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한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제일 클 것으로 여겨진다.

이병학 중앙자활센터의 출범으로 자활사업이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전문적이고 풍부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협회와 잘 조율해 나가면서 자활사업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기를 바란다.

조충현 중앙자활센터가 앞으로 자활사업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좋은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황덕순 자활사업을 통해 그 동안 축적한 소중한 경험의 자산들이 자활사업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자활제도의 발전 모델을 꾀하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기초생활보장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활사업은 그동안 많은 한계를 노출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키워드로 정부는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을 준비 중이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추진 배경과 사업내용, 진행상황 등에 대해 알아봤다.

자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키워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도 자활사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최저생계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의지를 북돋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활역량의 향상으로 탈수급이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활사업은 복지재정의 건전성[1]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적, 지역적인 기여에도 공헌했다. 무엇보다 수급자에게 적극적인 자활의지와 역량을 키워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공공근로와 같이 임시단편적인 사업을 넘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사업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활사업 통계 결과를 봐도 취업과 창업에 성공한 참여자의 비율이 전체의 14%로 탈수급비율[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진입이 가능한 439개 자활공동체와 2,014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가운데 15%(3,500명)가 넘는 인원이 매년 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242개 지역자활센터와 6개 광역자활센터가 기본 인프라를 구성하고 간병, 청소, 집수리, 자원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서비스 사업의 토대 마련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진행해 왔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미흡하였다. 양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와의 연계성이 낮고, 통합급여로 인해 탈수급으로의 유인이 부족하였다.

또, 근로연계복지의 성격이 강한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에서 수급자가 제외되고, 자활장려금[3]이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에게만 적용 되는 등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자활센터마다 기관운영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종사자의

〈표 1〉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2007년) (단위 : 천명)

참여 인원	계 (a+b)	소계(a)	복지부(a)			노동부 (b)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창업지원	
실인원	60 (100%)	58 (97%)	48	3	7	2(3%)
누계	87 (100%)	83 (96%)	68	5	10	4(4%)

1) 간병사업 등의 자활사업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결과,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중 간병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간병인 1인당 약 4,322~6,208원의 순편익이 발생(정영호, 2005년)

2) 2007년 기준 자활사업 참여자 중 수급자에서 벗어난 비율은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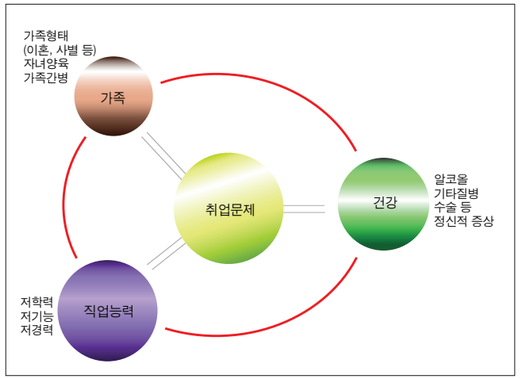
3) 자활장려금이란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등(약 2만 명)에 대해 소득의 30%를 공제하는 제도

사업실적 제고를 위한 유인장치가 부족하였다. 성과지표를 통해 수급자의 탈수급 비율만 보더라도 자활사업의 사회적 편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빈곤탈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소득을 획득해야 하는데, 자활급여 참여 경험으로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부족하였다.

종사자의 낮은 임금도 문제다. 근로강도는 높은 반면, 임금은 낮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4]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성과관리형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자활제도의 발전적인 모델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림1〉 취약계층의 복합적 특성



빈곤가구의 빈곤 탈출과 예방효과 위한 전략적 접근

성과관리형(outcome funding) 자활시범사업의 기본방향은 자활사업 수행기관들의 관리능력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급자 외의 잠재수급자인 차상위계층까지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빈곤가구의 복합적 욕구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빈곤탈출 및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지표 이행여부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과에 기반한 예산지원이 가능하여 재정성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다음은 근로빈곤 가구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이외에도 복지서비스, 의료, 직업능력개발, 의식전환, 자녀교육 등의 종합적 접근과 기존의 창업위주 지원에서 한걸음 나아가 지역단위 취업 등 근로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자활센터나 고용지원센터와 같은 공공부문 수행기관 이외에도 전문성 있는 국내외 민간기관의 참여 통로로 확대해 근로빈곤 관련 서비스시장을 형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출현[5]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지역자활센터 업무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업실적과 연계된 사업지원방식이 바뀌고, 다양한 민관파트너십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 구체적인 목표설정에 따른 대상자 맞춤형으로의 자활

〈그림2〉 해결방안 : total solution

4) 자활 종사자의 임금은 전체 사회복지사 연봉의 85.3%, 장애인 이용시설의 80.5%, 노인이용시설의 85% 수준에 불과(1호봉 기준)

5) 근로빈곤관련 세계 서비스시장 규모는 년 약 6조원(60억$)으로 빠른 성장 추세, 자활분야 주요 글로벌기업 현황 : 미국(Maximus, Rescare), 호주(Ingeus), 영국(WorkDirection), 독일(Maatwerk), 네델란드 등(파인낸셜타임즈, '08.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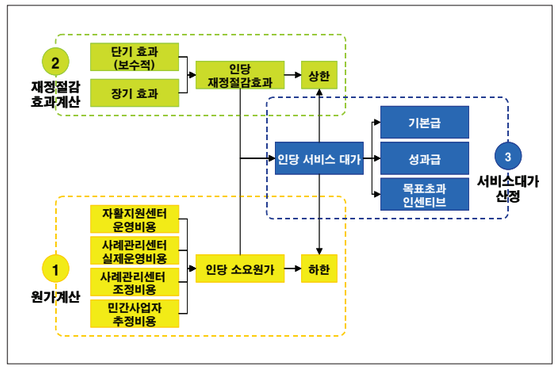
〈표2〉 성과목표 지표

지표	현재	개선(검토 중)
취업률	14%	30%
취업유지율	59%	70%
탈수급률	6.3%	15%

〈표3〉 예산지급 방식

구 분	기본급	성과급		
		취업 (창업 포함)	6개월 취업유지	(수급자)탈수급 (차상위자)소득규모
1인당 지원액	150만원	85만원	85만원	110만원

〈그림3〉 outcoming funding 지원을 위한 프레임



사례관리가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위주의 자활사업에서 취업기능이 보강되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촉진과 경제활동 유지에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성과지표 개발, 시범지역 선정, 홍보 등 사업추진 위한 토대 마련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기존의 탈수급율[6]을 비롯하여 취업지표와 취업유지지표를 포함한 성과지표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목표치에 대해 조정을 진행 중이다.

예산지원방식은 1인당 서비스 비용[7]을 산정하기 위해 원가분석을 한 후, 비용이 나오면 기본급의 일정금액을 선지급하고, 성과목표 달성 시 미지급을 후불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방식이 적합한 지역으로 경기도와 부산시를 선정했다(2008년 10월). 이를 위해 해당지자체와 향후 사업수탁기관에 대한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3년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기존 관계자인 지역자활센터의 협조와 공감이 필수적인 사업이라 사업취지와 방향 등에 대해 기존 지역자활센터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미 수차례의 대화와 설명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접수한 의견들은 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국내외 기관에도 사업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 지난 11월과 12월에 2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기본내용을 알리고, 시범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사업공고, 수탁사업기관 선정, 계약 등의 공식적인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객관성을 보장하고,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준비된 지침으로 사업수행기관들이 보다 높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수탁기관의 자율적인 재량행위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영역을 통해 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재정투입의 효과를 선명하게 보임으로써 자활사업이 좀 더 보편적 복지로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2009년이 기다려진다.

6) 당해년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수급자에서 벗어난 비율

7) 자활서비스 비용 산정은 원가계산(하한)과 재정절감효과(상한)에서 적정 비용부담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정가격 산정〈참고 outcoming funding 지원을 위한 프레임〉

돌봄 서비스 프랜차이즈로 사회서비스를 선도한다

도움을 나누는 세상 도우누리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중앙자활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8년 11월 (주)온케어를 설립하였다. (주)온케어의 설립 배경과 의의, 사업내용 등에 대해 알아봤다.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선도할 영역을 발굴하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고령화, 여성경제활동 참여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에 공공투자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주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보조금 지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운영방식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영세성[1]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사업모델 발굴의 어려움으로 고부가가치형 신규서비스의 개발이 미흡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수는 모두 300만 개로 전체 일자리의 약 13.1%에 불과하다.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용 잠재력이 크지만, 선진국에 비해 발전이 미흡한 상황이며 사회서비스 영역의 부가가치 비중 또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2] 고급 · 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신규 사회서비스 창출을 위해 정부는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을 2008년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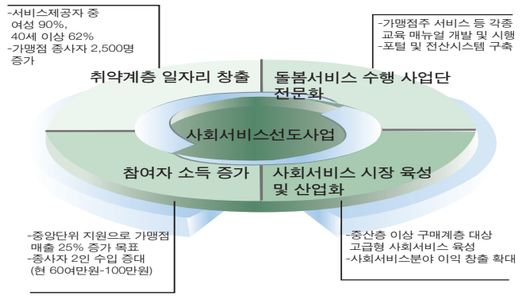
전국의 지역자활센터는 장애인, 산모, 노인, 가사간병 등 4개의 돌봄 서비스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서비스제공기관과 비교해 매출 규모가 매우 영세하며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행과 민간업체 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의 돌봄 서비스 분야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중앙자활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 11월 (주)온케어를 설립하였다.

〈그림1〉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의 비전과 전략

비 전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한 능동적 복지 구현			
전 략	• 공동사업화/규모 확대를 통한 영세성 극복	• 고급형/신규 서비스 확충	• 능력있는 서비스 공급주체 형성	• 사각지대 해소
실행방안	• 비영리 돌봄사업기관 프랜차이즈화 지원	• 전문지식/기술기반의 서비스 전문화	• 사회서비스 분야 선도적 기업 육성	• 민간자원의 활용

〈그림2〉 돌봄 서비스기관 프랜차이징 사업의 의의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활동의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

(주)온케어가 중점적으로 전개하려는 사업내용은 크게 4가지이다. 전국적 브랜드 공동사용으로 인지도와 신뢰성 향상, 이용고객 증대를 위한 마케팅 · 홍보활동 지원,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업무간소화를 위한 경영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이 그것이다.

첫째, 공동브랜드 개발_ 이와 관련해서 기존지역 브랜드와 병행사용을 고려하고 현판, 유니폼 등 브랜드 사용물 실비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가마지'나 '케어 119' 등과 같은 지역자활센터의 기존 지역브랜드도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_ 이를 위해 지역 내 기관, 노인회관 등의 방문홍보 방안을 수립하여 신규고객을 발굴하는 한편, 인터넷이나 잡지 등 대중매체 홍보를 통해 고객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고객상담, 서비스 요청접수, 부가 · 연계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업체와 단체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시장 개척을 적극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교육훈련 지원_ 가맹점 실무자 및 참여자를 위한 실기위주의 표준 매뉴얼과 동영상 교재를 개발하고, 자체 보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정기 모임과 보수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활센터도 적지 않으므로, 각 자활센터의 필요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교육에 좀 더 구체화된 전문적 교육과 지속성을 가진 교육훈련 시스템을 제공할 생각이다.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6개월 단위로 집합교육을 하고, 매월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업무 간소화를 위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의 제공_ 현장에서 노무 및 행정 관련 업무가 간소화된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 행정업무의 간소화가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맹점에 제공하고, 노무, 세무사를 연계한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할 것이다.

향후 (주)온케어는 네트워크화 사업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역단위의 지사조직을 설립하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9년 8월 말까지 100개의 가맹점을, 2차 년도에는 다시 100개의 가맹점 추가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 수준 제고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해 시장에서의 확고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3차 년도부터는 독자적 수익기반을 달성한다는 목표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층 고용취약 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가 제조업 및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점을 감안할 때[4] 민간 장기투자 시장의 새로운 유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돌봄사업기관 연평균 매출 1억 원
2) OECD 평균 21.4%, 우리나라 17.8%로 17위(OECD ST DB, 이진면 2006 재인용)
3) 취업 유발효과 : 사회서비스(27.6%), 서비스업 평균(20.5%), 제조업(12.1%)
4) 창업 이후 4년간 기업생존율 : 사회서비스 분야(66.2%), 사업체 평균(38.3%)



글 ● **김홍수영**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사회적배제연구센터 박사과정

job centre plus

'분배'를 표방하는 영국 정부의 정책 변화

2008년은 영국경제에 악몽과 같은 해였다.
미국과 함께 세계금융의 중심이었던 영국이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근대 사회정책의 본산인 영국의 최근 정책변화와 자활사업 동향 등에 대해 연재한다.

유럽의 정책동향에 관한 글을 연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첫 번째 글을 어떻게 열어야할지 고민이 되었다. 곧바로 해외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표면적인 정보전달에만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대 사회정책의 본산인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은, 한국의 사회정책이 갖는 철학적 빈곤이다. 한국에서 복지정책을 만들 때는, 일단 북미와 유럽의 정책동향을 조사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일본의 사회정책학자인 펭(Peng)은 동북아시아의 복지정책을 '산책학파적' 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바로 동북아시아의 복지정책이 서구를 산책하면서, 각 나라의 정책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일부 비교정책학자들은, 동북아시아의 정책에는 자체적인 철학이 없으며, 그나마 존재하는 철학이라고 한다면 필요할 때마다 서구의 정책들을 복사해다 쓰는 '실용주의'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활정책도 아주 예외는 아니다. 스페인의 '생산자협동조합' 미국의 'TANF' 유럽의 '사회적 기업' 그리고 최근 미국과 호주의 '영리기업 파트너십' 까지 기원과 지향이 판이하게 다른 정책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때문에 해외의 정책동향을 소개하는 일이 조금은 조심스럽다. 분명 서구로부터의 정책이전(policy transfer)은 자활사업이 성장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하지만 자활사업이 '제도의 성장' 에서 '철학의 성숙' 으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에서 맥락이 다른 해외정책들을 훑어보는 일은, 자칫 이미 말이 넘치는 곳에 오해의 말들을 덧붙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유럽의 정책동향을 살펴보는 지금도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다. 앞으로 서구의 정책을 한국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번호에는 우선 영국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





'분배' 를 표방하는 영국 정부의 정책변화

2008년은 영국경제에 악몽과 같은 해였다. 미국과 함께 세계금융의 중심인 영국은 금융시장의 위기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2008년 11월 영국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삼사분기(6~9월)의 실업률은 199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5.8%)를 기록했고, 생계비를 신청한 수급자수도 1992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영국사회를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점은 이러한 경제위기가 2009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부분의 경기불황이 주로 빈곤층에 타격을 입히는 것과 달리, 금융시장의 위기는 중산층의 삶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민원 상담실의 2008년 하반기 상담수를 집계해 보면, 신용경색과 이로 인한 대량실업 때문에, 주택융자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화이트칼라가 상반기에 비해 52%나 늘었을 정도다.

이에 집권 노동당은 불황에 매우 급진적인 대책들을 내놓았다. 고든 브라운 수상은 "비상한 시국은 비상한 정책을 요구한다." 고 못을 박으면서, 보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배' 를 표방하는 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11월 말에 발표된 2009년 '예비-예산 보고서' 를 살펴보면, 빈민층에 부담이 되는 부가가치세를 2.5% 포인트 낮추고, 이로 인한 재정손실은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45%까지 올리는 것으로 보충한다고 한다. 또한 아동수당과 저소득층소득세보전보조금 인상을 위해 200억 파운드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같은 불황 속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2009년 사회복지예산을 감축하기로 한 한국 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대응이다.

실업대책에서도 진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과거 블레어 정부는 미국의 '고용-우선 정책(work-first policy)' 과 유사하게 불완전한 노동시장에라도 우선 취직하는 것을 권장하는 관점을 취해왔다. 그러나 2009년 각 부처의 실업대책들을 살펴보면, 재교육 프로그램(training-first policy)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 및 지방정부 부처(DCLG)' 는 장기실업자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 15억 파운드 규모의 '일하는 이웃 기금(Working Neighborhoods Fund)' 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에 일자리가 생겼을 때 Jobcentre Plus(한국의 지역자활센터, 고용지원센터에 해당)가 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지역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덧붙여, 영국 정부는 Tesco(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이나 Royal Mail(우체국)과 같은 공기업들과 '국가 고용 파트너십(National Employment Partnership)' 을 체결하여, 이들 기업에서 실업자들이 재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브라운의 내각이 과거 노동당이 표방하던 '제 3의 길(신노동당 정강)' 을 등지고, 다시 정통 좌파로 선회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아직 그 향방을 확언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년간의 노동당의 방침으로부터 단절하겠다" 는 고든 브라운의 선언은 이런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듯하다.

그러나 구조적 실업에 대한 관대한 대응책과는 달리, 자활사업과 관련해서는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크게 논란이 될 만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빈곤' 과 '나태' , 딜레마에 놓인 영국의 자활사업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가로 조건부과를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자활사업에 상응하는 영국의 프로그램으로는 뉴딜(NEW DEAL)을 들 수 있다. '노동 및 연금 부처(DWP)' 의 2009 복지개혁안을 살펴보면, 재정면에서 뉴딜 정책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급증하는 실업자의 수에 대비한다는 목표 아래, 13억 파운드를 투입해 Jobcentre Plus들을 지원하고, 2000명의 실무자들을 재훈련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사안은 생계비 보조에 대한 조건부과 또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노동능력이 있으면 가족형태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생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한부모가정이라면 뉴딜정책에 반드시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가장 어린 자녀가 12세 이상이라면 구직활동을 해야만 생계비 보조(Jobseeker's Allowance)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이번 개혁이 빈곤정책의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이와 다른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빈민들 중에는 무조건적인 생계비 보조가 필요한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 과 적극적인 실업대책이 필요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 만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어도 노동을 하려하지 않고 생계비에 의존하는 빈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이들이다.

며칠 전, 대표적인 진보언론인 가디언(The Gardian)에서 한부모가정의 조건부과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에 한 논객은 다음과 같은 색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극복해야 하는 5대 사회악(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에 '빈곤' 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빈곤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빈곤정책이 또 다른 사회악인 '나태' 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던 게 사실이다."

물론 한국의 자활사업을 논할 때, '빈곤과 나태의 딜레마' 에 대한 영국의 담론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담론이 가리키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영국이 아무리 복지체제를 '보수적' 으로 개편해왔다 하더라도, 영국의 복지예산은 여전히 한국의 몇 배에 달한다. 또한 뉴딜 정책과는 달리, 한국 자활사업은 처음부터 한부모가정에 엄격한 조건부과를 해왔고, 단순한 구직활동을 넘어서 사업단 참여와 취업을 조건으로 걸어왔다.

그러니 한국은, 현재의 영국처럼 '나태' 를 말하기에 앞서서, 과거의 영국처럼 한부모가정에 차별화된 자활사업을 지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한부모가정은 조건부수급자의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특수한 욕구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와 소수민족 포용 필요성도 제기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려 한다.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영국의 물가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높다.

하지만 이에 맞게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한마디로 유학생 신분이라서 만년 소비자인 사람에게는 참으로 살기 어려운 국가일 수 있지만, 노동자에게는 대체로 살기 편한 곳이다. 때문에 동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난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문제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거나, 기술이 없는 이주민들은 빈민이나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고학력자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감원의 대상이 되곤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업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이주노동자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학계와 언론을 통해 간간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주노동자와 소수민족을 자활사업에 포용하려는 자세는, 내국인에게만 초점을 맞출 뿐 이주노동자, 조선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업과 빈곤정책이 매우 미흡한 한국사회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글 ● **엄형식** 리에쥬대학 사회적경제연구소 박사과정 연구원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



유럽의 강소국인 벨기에의 다양한 정책시도에 대해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주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개와 바우처 제도, 개별 사회적 기업 사례 등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보호 작업장, 노동통합 기업 등 공통으로 갖춰

벨기에에서 사회적 기업, 특히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은 1963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작업장' 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들이 등장하여 1990년대에 제도화되었다. 1980년부터 연방제를 도입한 벨기에는 현재 3개의 지방정부[1]가 각각 지역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 제도들을 갖추고 있으나, 왈룬과 브뤼셀은 대강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옆의 〈표〉를 중심으로 벨기에의 사회적 기업의 제도별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연방제 도입 이전에 시작된 '보호 작업장' 은 3개 지방정부에 모두 존재한다. 이들은 장애인의 지속적인 고용을 목표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 지역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또, '노동통합 기업' 이 있다. 노동통합 기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가진 구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유형이다. 한국의 자활공동체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표〉 벨기에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 유형

지역	유형	대상 및 목표	시기
플랑드르	beschuttewerkplaatsen (BWs)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지속적 고용	1963
	socialewerkplaatsen (SWPs) 사회적 작업장	최소 5년 이상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 고용	1998
	arbeidszorgcentra (AZCs) 근로센터	다양하면서도 심각한 원인을 가진 취약계층들에 대한 장기고용 (SWP와 같은 기원을 갖지만, 1998년 제도화를 통해 인정받지 않은 곳들임)	-
	invoegbedrijven (IBs) 노동통합기업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의 지속적 고용	1900년대 후반
왈룬	entreprises de travail adapté (ETAs)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지속적 고용	1963
	entreprises de formation par le travail (EFTs) 현장기반 훈련기업	26세 이하 저학력자 또는 25세 이상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훈련 및 훈련수당 제공	1991
	entreprises d'insertion (EIs) 노동통합기업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의 지속적 고용	1998
	initiatives de developpement de l'emploi dans le secteur des services de proximitfiné a finalité sociale (IDESS) 근린서비스 고용개발 이니셔티브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의 고용 및 훈련을 목표로 하면서, 주로 근린서비스 영역에 집중함	2006
브뤼셀	entreprises de travail adapté (ETAs)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지속적 고용	1963
	ateliers de formation par le travail (AFTs) 현장기반 훈련작업장	26세 이하 저학력자 또는 25세 이상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훈련 및 훈련수당 제공	1995
	entreprises d'insertion (EIs) 노동통합기업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의 지속적 고용	1999
	initiative locale de developpement de l'emploi (ILDEs) 고용개발 지역이니셔티브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전환적 고용	2004



참고자료 | Gregoire, O., "National Profiles of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 Belgium", WP no 03/08, ELEXIES Project, 2003
Solidarite´,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as a tool for promoting inclusion : Case of Belgium", WISE Project, 2008 (미공개 자료)
리에쥬 대학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www.ces-ulg.ac.be

취약계층 고용에서 지역개발, 근린서비스 등으로 확장

왈룬과 브뤼셀 지역에는 '현장기반 훈련기업(또는 작업장)' 이라는 유형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한다. 이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하지만, 취약계층 참여자들은 피고용인이 아닌 훈련생의 신분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

최근 브뤼셀과 왈룬에서 등장한 사회적 기업의 형태는 취약계층의 유형보다는 활동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로 지역개발, 근린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들 유형은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의 의미가 취약계층 고용에서 지역개발, 근린서비스 등 활동의 내용으로 확장되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제도별로 유형화할 수는 없지만, 민간의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업종별 네트워크 등이 존재한다.

한편,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민간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기업의 지위를 갖는 조직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995년에 도입된 사회적 목적기업(société `a finalité sociale, SFS)이라는 별도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2]. 가령, 벨기에에서는 협동조합을 영리기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SFS 지위를 얻어야 한다. 왈룬과 브뤼셀의 경우, 노동통합기업은 SFS의 지위를 가진 영리기업이어야 한다.

벨기에는 작은 규모의 국가이고, 연방제라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한국의 정책관련 논의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던 나라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선도적인 실험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 가사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중심으로서 유럽의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토론되고, 연구되는 중심으로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벨기에는 다언어를 사용하는 연방국가로서, 각 지방정부는 높은 수준의 자치를 이루고 있다. 연방정부 이외에 지방정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지역적 경계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지방정부로는 북쪽의 플랑드르 정부, 남쪽의 왈룬 정부, 그리고 수도인 브뤼셀 정부가 있으며, 언어적 경계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지방정부로는 네덜란드어의 방언인 플랑드르어를 사용하는 플랑드르어권 공동체 정부, 불어를 사용하는 불어권 공동체 정부 그리고 소수인 독일어권 공동체 정부가 있다. 연방정부, 지역중심 지방정부, 언어중심 지방정부는 권한의 범위가 다르지만, 종종 동일한 이슈를 각각의 차원에서 동시에 다루기도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할은 지역중심 지방정부의 소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SFS는 영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제도의 배경과 구조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육성법과 유사하다. 유럽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두 가지 제도화 경향, 즉 독자적인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경향과 기존 지위에 사회적 성격을 인정해주는 경향 중에서 SFS는 후자의 선구적인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글 ●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자활, 지난 10년의 성과와 미래비전

우리나라에 자활사업이 도입된 지 이제 막 10년이 되었다. 그 사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적잖은 성과가 있었지만, 발전적인 미래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다 힘 있는 혁신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2월 12일 열린 중앙자활센터 설립기념 토론회의 기조 발제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자활사업의 성과, 그리고 미래비전을 되짚어 보았다.

자활사업, 10년의 성과와 문제점

지난 1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자활사업의 성과를 꼽자면 무엇보다 먼저 민관(民官)의 축적된 사업경험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사업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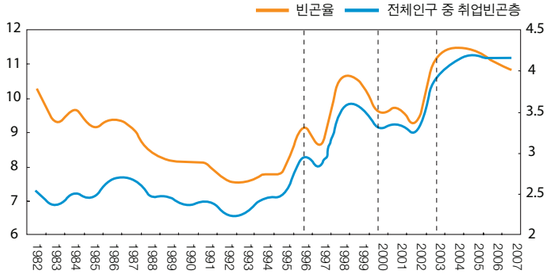
하지만 근로 유인형 기초보장제도와 프로그램 성공모형, 향후 개편전략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위기국면에서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힘 있는 혁신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자활사업의 성과가 낮은 원인으로 지적된 세 가지 문제, 즉 취업을 억제하는 소득보장제도(기초보장제도), 자활프로그램 내 근로 유인장치의 미비, 성공적인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경제 · 사회 환경의 변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중 근로빈곤이 핵심문제이며, 이것은 2009년을 기점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미 2008년부터 빠른 속도로 취업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실직빈곤층이 동반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실직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창출과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고, 시장부문의 고용감소가 취업촉진정책의 기반을 약화시킴에 따라 일정기간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다만 외환위기 때와 달리 다양한 공급자가 존재해 공급자 간의 경합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이 확대되어 투입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1982년 이후 취업빈곤율 추이



1)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대상
2)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
자료: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자활지원대상 규모면에서도 자활사업 주대상 연령인 25세~54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는 76만 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참여자는 잠재적 지원대상의 7.9%를 보호하는 수준이다.

자활사업의 비전

앞으로 1~2년은 자활사업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자활사업은 제도개편 과제에 집중하기보다 걸림돌이 되어왔던 사항들을 사안별로 해결해가면서 공급총량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전략방향으로 취업촉진사업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재정을 통한 일자리사업 효율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과의 협의를 통해 성과중심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빈곤층의 82%에 이르는 근로빈곤층 및 해당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근로연계복지제도를 지향해야 한다.

자활사업은 다음 세 가지 기본이념(성공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첫 번째,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참여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는 참여자와 지원조직(사업단)의 도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의성과 자발성을 북돋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전 실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소득 보장)가 마련되어야 한다. 취업이나 창업의 실패가 각 개인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더불어 자활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지원체계 측면에서의 제도개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프로그램 설계의 전제조건으로서 지역단위의 노동수요 파악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이후 공급과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기존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실제 근로 가능한 집단'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고,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개편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노력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자활사업이 운영돼야 하며,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도 세제지원과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지원체계 측면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핵심영역별 민관협력형 지원네트워크 구축,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와 평가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자활사업의 단기 개편방안

당장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쉽지 않은 현실과 경제상황에 따른 단기적이지만 사업이 확대될 개연성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식으로 단기 개편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자활공동체를 선별하고, 사회서비스 부문 자활공동체부터 과감하게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광역자활센터는 사업지원 네트워크로 활용하여 서비스와 재화의 물류와 판매네트워크로 지원 · 육성해야 한다.

또한 향후 내수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에 대비하여 마이크로크레딧과 자활공동체를 연계해 보건복지서비스업과 환경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업성과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작업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희망의 빈곤을 키우고 밝은 미래의 문을 여는 키(Key)가 되어 주길”

지난 8월 중앙자활센터가 출범하였다. 전국의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받쳐 줄 든든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 중앙자활센터의 힘찬 승선에 희망의 꿈을 키우는 이들이 있다. 센터의 활약을 기대하는 일선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중앙, 광역, 지역자활센터의 전달체계 확립에 노력해 주길

정덕규 | 대구광역자활센터장



자활사업이 다양한 복지사업의 최종 통로라는 관점에 있어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전국적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광역자활센터도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시점에서 중앙자활센터가 지난 8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데 대한 기대와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지역자활센터가 대상자들과 함께 알찬 자활사업을 수행하도록 정책개발 · 홍보 · 교육사업 및 자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냄으로써 중앙, 광역, 지역자활센터의 전달체계 확립에 우선 과제를 두고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활사업의 싱크탱크, 파이팅!

박서춘 | 부산광역자활센터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프라로서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 가구의 희망인 자활사업 진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진행 과정에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광역단위의 지원과 규모 확대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바람이 해소되어 부산지역에도 광역자활센터가 생겼으며, 또한 우리나라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자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활사업의 싱크탱크, 중앙자활 파이팅!



현장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희망터 되길

원응호 | 강원광역자활센터장

한국형 실업과 빈곤극복의 대안으로 시작된 자활사업은 많은 가능성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수행해 온 현장경험과 노하우는 더욱 소중합니다. 이러한 자활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자활사업의 전망을 만들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는 중앙자활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활사업의 큰 나래가 되길 기원합니다

장경동 | 인천광역자활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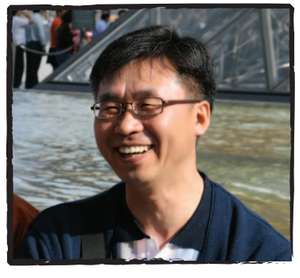
자활사업에 힘쓰시는 중앙자활센터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자활센터가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자활사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활현장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책방향 제시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이루어 저소득층의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활사업을 위해 아낌없는 버팀목이 되고, 자활사업의 큰 나래가 되길 기원합니다.

성과를 이끄는 전문적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정근 | 경기광역자활센터장



중앙자활센터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제위기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진 지금 국가와 사회는 우리국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간 자활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꾸준히 해왔지만, 아직 사회적 인식과 지지가 부족합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생산 · 나눔 · 협동의 가치와 더불어 사업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적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일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중앙자활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립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자활의 신기원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백규인 | 전북광역자활센터장

중앙자활센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은 중앙자활센터와 전북광역자활센터가 출범한 뜻 깊은 해입니다.

중앙자활센터 출범으로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활의 관제탑 역할을 담당할 중앙자활센터의 설립으로 광역 및 다른 지역자활센터들의 사업수행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업의 시행매뉴얼을 비롯해 광역화사업 모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자활환경에 적응하고 생산적인 자활사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도 요구됩니다. 중앙자활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우리나라 자활의 신기원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에 힘을 쏟길

이규선 | 성동지역자활센터 팀장

중앙자활지원센터의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중앙자활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일선의 실무자들은 전국의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축과 지역별 자활센터 간 효율적인 네트워크망을 조직하는 일에 센터가 힘을 쏟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파이팅하면서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한 중앙자활센터가 되길

박찬무 | 천안지역자활센터 실장

자활은 네트워크가 생명입니다.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우리의 네트워크야말로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자활센터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자활 종사자의 재교육을 통한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자활센터는 개별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자활이 가지고 있는 가치철학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도, 자활 실무자도 아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한 중앙자활센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가는 동지로서 애정을 담은 비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자활현장에 굳게 발을 딛고 함께 하기를

이승우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처장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진영의 오랜 소망과 노력이 가져온 결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와 중앙자활센터는 상호협력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중앙, 광역, 지역은 상하 또는 행정적인 분리가 아니라 서로의 역할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역현장의 헌신과 중앙자활센터의 지원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 자활사업은 보다 큰 성과를 낳고, 어렵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자활의 꿈을 일구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활은 새로이 태어남이며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앙자활센터 또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동시에 언제나 처음처럼 자활현장에 굳게 발을 딛고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활제도가 가난한 지역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되길

김교연 |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사무국장

중앙자활센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자활제도가 중앙자활센터를 통해 가난한 지역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되어 가난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확대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맡으신 분들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지역자활센터의 동지들과 함께한다면 그 부담감과 짐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한 자활제도가 이 사회의 빈곤을 방지하고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제도라면 그 무엇보다도 청소년자활도 같이 가야 하는 중요성은 모두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활급여법상에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청소년자활지원관에도 교육지원 및 사업지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자활사업이 보편적 복지로 가는 스위치 되길

조충현 |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투자과 사무관

그동안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능력 유지와 향상, 소득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서비스의 아랫돌이 되어 기초복지 인프라의 촘촘한 그물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거리 경주를 해온 자활에는 장거리 경주를 할 수 있는 체력과 계획을 만들고 지원할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자활센터의 출범은 훌륭한 현장의 활동가 및 성과를 만들어 내고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이루는 '전환 스위치'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성장만큼이나 커지지 못한 '희망의 빈곤'을 키우고 밝은 미래의 문을 여는 키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립의 발판으로 능동적 참여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소민정 | 경기도청

2008년 드디어 자활사업 참여자와 실시기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실 중앙자활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저 지원만 해주면 끝나는 복지가 아닌 '일을 통한 자활'이라는 목표 아래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참여자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항상 새로운 벽에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중앙자활센터의 설립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자활관계자의 염원을 담아 '자활'이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이행 수단이 아닌 진정한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능동적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기원합니다.

소통과 나눔으로 더 행복한 자활세상

2008 전국자활연수대회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고 (재)중앙자활센터와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공동주관한 '2008 전국자활연수대회'가 지난 11월, 이틀에 걸쳐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 자활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242개 지역자활센터와 6개 광역자활센터 실무자 등 600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어느 대회보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소통과 나눔으로 더 행복한 자활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2008년 전국자활연수대회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공유의 장 : 2009 자활사업의 기본 방향을 함께!

스태프들은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접수대와 음료대를 준비하고 행사장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테이블을 배치하고, 음향기기와 각종 기자재를 확인하고…. 3시간여에 걸친 대회장 세팅이 드디어 끝이 났다. 유달리 참가자가 많은 이번 대회는 접수대도 9개 권역으로 나뉘었다.

스태프들은 대회의 시작인 접수부터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낮 1시가 가까워 오자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만난 각 지역 실무자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찻잔을 기울이기도 하며 먼 길을 달려온 여독을 풀었다.

드디어 오후 2시!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2008, 전국자활연수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첫 순서로 자활사업 우수지자체 22곳과 자활사업 유공자 공무원 22명, 민간 15명, 자활공로 및 성공수기 당선자 중 은상 이상의 수상자 1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수상자들은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금 자활사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으리라!

이어서 보건복지가족부 김원종 사회서비스정책관의 격려사와 전라북도 이경옥 행정부시장의 환영사, 그리고 (재)중앙자활센터 이선우 원장과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병학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린 시간이 다가왔다. 다름아닌 2009년 자활제도 브리핑!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투자과에서 준비한 이 시간은 자활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수립된 정부의 예산지원 및 관리방식의 선진화 방안, 사전 예방적 빈곤정책의 기능강화 등 2009년 자활사업의 기본 방향과 세부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어 갈렙ABC의 정성출 대표가 '즐거운 사업계획' 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2시간여의 특강 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시종 진지한 표정을 하고는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참가한 50여 팀 가운데 경기지역 등 3개 팀이 우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소정의 상금을 받기도 했다.



특강을 마친 후에는 저녁식사와 함께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다. 레크리에이션에 앞서 '자활이란?' 이라는 질문에 짤막하게 답을 하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부산광역자활센터의 '땀과 열정' , 충남지부의 '징검다리' , 강원지부의 '텃밭' 이 우수팀으로 선정되어 깜짝 선물로 기쁨을 나눴다. 해 질 녘 대회를 축하라도 하듯 첫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다. 귀갓길 교통 혼잡 걱정은 뒤로 한 채 모두들 변산반도 해변과 어우러진 설경에 들뜬 표정이 되었다. 금세 어둠이 내리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다. 참가자들은 피곤함도 잊고, 바닷가를 찾아 나섰다.







둘째 날의 일정은 휴너지 리더십센터 권오훈 소장의 강의로 시작되었다. '유쾌하게 소통하라!' 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참가자들은 저마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교육에 임하면서 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

특강을 마지막으로 대회 주요일정은 마무리되었다. 대회를 돌아보는 영상을 본 후 스태프들이 무대로 나와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병학 회장의 폐회사로 2008년 전국자활연수대회는 마침표를 찍었다.

모든 행사가 그렇듯 마치고 나면 시원함과 섭섭함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중앙자활센터 설립 이후 처음으로 주관한 대회라서 더욱 마음이 쓰이는 행사이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과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었다.

행사의 주제처럼 이번 대회를 계기로 참가자와 스태프 사이,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민간과 공공기관 실무자 사이, 자활사업 정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실행기관 사이 소통의 통로가 조금씩 열리기를 바란다. 또한 대회를 통해 얻은 활력을 지역사회에 돌아가 더 큰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하얗게 덮인 변산반도를 바라보며 자활사업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안고 떠나는 길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빈곤층의 자립의지 북돋우는 '착한' 대출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대출은 대출인데,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창업을 돕고, 경영컨설팅도 해 준다. 사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인다. 바로 '마이크로크레딧' 얘기다. 빈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착한 대출, 마이크로크레딧의 운영과 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알아봤다.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은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생업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해 주는 자활지원사업을 말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빈곤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정받는 마이크로크레딧은 특히 빈곤, 취약계층에게 소액대출이라는 일방적 지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줌으로써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대출방식이다.

빈곤층의 자립의지 북돋우기 위해 총체적인 지원책 펼쳐

우리나라에 마이크로크레딧이 도입된 것은 1999년 '신나는 조합'을 설립하면서이다. 이후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가게가 마이크로크레딧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융권, 기업, 민간단체 등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활동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경기침체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기금운영기관의 대출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의 대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모임과 경영지도 등으로 이루어진 사후관리 활동이 핵심이 되고 있다. 그간의 기금운영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은 빈곤층 대출지원뿐 아니라, 창업과 운영을 도와 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반은행과 차별되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자선사업과도 구별된다. 즉, 마이크로크레딧의 궁극적인 목표는 빈곤층의 자립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문과 사후관리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빈곤층의 자립 의지를 북돋우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등 절대 빈곤국에서 성과를 거두었던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한 만큼 우리

〈표1〉 마이크로크레딧기금 운영 기관 현황(2008년 11월 현재)

구분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경기광역자활센터	인천광역자활센터
개시	2000년	2002년	2004년	2003년	2007년	2007년	2008년
사업 대상	빈곤 · 취약계층, 특수소외계층	여성가장, 수급자, 차상위, 자활공동체	빈곤 · 취약계층, 소호창업, 자활공동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자활근로 및 공동체	자활근로 및 공동체
사업 내용	공동체중심창업지원, 사회적기업지원, 한국형마이크로 크레딧모형개발	창업지원, 경영개선자금지원	창업지원, 경영지원, 운영지원	음식점, 서비스업 창업	창업지원, 경영 및 운영지원	창업지원, 경영 및 운영지원	창업지원, 경영 및 운영지원
재원	법인, 보건복지가족부, 기업, 개인후원금 및 출자금	보건복지가족부, 기업후원	법인출연금	기업사회공헌 후원금	하나은행출연금	보건복지 가족부	보건복지 가족부

※이외 지역단위 자생적 운영 기관이 있음. 자료출처 : 국회의원 강명순의원실, 2008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2

나라 대상자 특성과 환경을 감안한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 또,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을 갖추고, 소액대출 이후 사업확대를 위한 추가 금융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금운영 민간기관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표2〉 정부 마이크로크레딧 기금 운영 현황(2008년)

	중앙정부		지방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사업명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	소액금융사업 창업자금지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사업시작	2005년	2008년	2008년
지원대상	차상위, 수급자, 개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	최저생계비 200% 이하 소상공인
지원규모	20억	28억	10억
지원조건	1년 거치 4년 상환	4~5년 이내	5년
지원금리	연2%	연6%이내	연2%
수행기관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경기 · 인천광역자활센터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기금을 2008년도에 비해 110억 원 증가한 총 13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2008.11.)

〈그림1〉 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운영 기관의 대출과정



사전예방적 빈곤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

정부는 마이크로크레딧이 '사전예방적 빈곤정책'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는 마이크로크레딧은 기금 및 운용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방식을 체계화한다. 동시에 민간재원에 의한 마이크로크레딧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 하에 기금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대상의 의료, 교육보험 등 민영 소액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료 일부를 공익기금에서 지원하는 소액보험제도(microinsurance)도 새로 도입된다.

후안 소마비아(Juan Somavia) ILO 사무총장은 최근 전 세계 불어 닥친 금융위기로 저소득층이 받는 충격이 크다며 신규실업자 등을 대비한 정부의 즉각적인 종합대책이 시급함을 역설한 바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그라민은행 총재 또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전히 중요하며, 총체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함을 시사했다.

2009년, 어느 때보다 사회취약계층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일회성 지원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림2〉 정부의 마이크로크레딧 운영 활성화 방안

분야	기존	'09년 추진 계획
예산확대	20억	130억 예상
지원대상 확대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 개인(수급자 · 차상위)
재원 다양화	정부 일반예산	정부 일반예산 저소득층 생업자금 자활기금
수행기관 다각화	비영리 기관 중심으로 수행	신규수행기관 발굴 일반 금융기관
전문인력양성	181명 교육	신규수행기관 발굴 일반 금융기관



중앙자활센터소식

중앙자활센터 설립기념 토론회



중앙자활센터 설립기념 토론회가 지난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광역·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정부와 학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활사업의 비전을 공유하였다. 이날 함께 열린 자활상품전에서는 17개 지역 자활센터가 함께해 자활생산품을 전시하였다.

업종별 마케팅 교육

사업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종별 마케팅 교육이 실시됐다.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의 주거복지학교(11월 13일~22일 교육) △청소사업단의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청소사업 실전과정(11월 20일~21일 교육) △전국자활영농사업단 네트워크교육(11월 26일~28일 교육) 등 세 가지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활복지포럼 '2009 자활사업의 쟁점과 전망'



지난 11월 28일 '2009 자활사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자활복지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한신대학교 이인재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열띤 논의 속에 진행됐다. 자활복지포럼은 중앙자활센터가 지난 10월 자활의 현재를 진단하고 비전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전문가 모임. 운영위원은 협회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각 분야 연구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참가자를 더욱 확대하고 외부와의 공동포럼 개최, 전문가 초청 등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이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직무교육

최근 2008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종사자들의 직무 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23일 서울지부에서 시작해 12월 9일 경북지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자활사업 경영전략 수립, 리더십, 자기관리, 마케팅기획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장기근속 실무자 재충전교육



지역자활센터 장기근속 실무자를 위한 재충전교육이 지난 10월 22일부터 2박 3일간 충북 충주시 캔싱턴리조트에서 실시됐다. '쉼과 재충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실무자들에게 창의적 마인드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계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역·광역자활센터 평가 및 지표개선



2009년도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예산지원을 위한 평가와 지난 2004년도부터 시작된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두 가지 평가는 모두 2008년 12월에 완료될 것이며, 향후 자활사업 평가체계 개편과 지표개선 등 성과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자활사업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광역자활센터소식

강원 _ 체인지 리더 양성교육 수료식

지난 12월 5일 RM과정 '체인지 리더 양성교육' 수료식이 있었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이 교육은 자활사업 맞춤형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다양한 컨설팅 방법을 습득해 내부 동력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 _ 자활체험릴레이 행사



경기광역자활센터와 협회 경기지부는 경기도 공무원과 의원, 지원기관, 사업체가 함께하는 자활체험릴레이 행사를 가졌다. 광역자활공동체이자 사회적기업인 '에코그린'과 '컴윈'에서 지난 11월 21일과 31일 진행된 이 행사는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작업환경 및 소득구조 개선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경기 _ 자활경영전문가과정 열어

경기광역자활센터는 'J&A 컴퍼니'와의 컨소시엄으로 지난 11월 11일부터 자활경영전문가과정을 열었다. 이 과정은 경기도 내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32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37명을 대상으로 전문/심화/실습 등 3단계로 실시, 오는 2009년 3월 18일까지 매주 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대구 _ 취업 실무자교육 실시

지난 12월 9일 대구지역 6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2차 취업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9월 25일 실시한 1차 교육에 이어 진행한 것으로, 대구지역 취업지원기관의 운영사례, 취업상담기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대구 _ 광역자활공동체 대상 자격취득 교육 실시

대구통합교육보조원이 취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11월 미술치료 교육(20회 과정)과 12월 종이접기 교육(48시간 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조합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로 자격증 취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안정적인 취업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_ 저소득층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부산광역자활센터는 사회연대은행과 손을 잡고 '저소득층 맞춤형 창업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과 자금이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교육에서 창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인천 _ 일자리 사업 홍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인천광역시 일대 39개 장소에 플래카드를 걸고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천 _ 자활사업 전시회 열어



인천광역자활센터는 12월 중 인천지하철 역사 안에서 지역 자활사업 전시회를 열었다.

전북 _ 우수지역자활센터 현장견학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자활사업 발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인천광역자활센터와 대구광역자활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지역자활센터장과 지자체 자활담당자, 전북광역자활센터 실무자 등 43명이 함께했다.

전북 _ 자활사업 홍보교육

지난 11월 13일 도내 18개 지역자활센터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활센터의 사업내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성공 또는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기사 작성법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다.

광역자활센터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강원광역자활센터	033-244-0288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662 한국노총빌딩 3층
경기광역자활센터	031-267-0140	수원시 권선구 세류 1동 179번지 세지빌딩 4층
대구광역자활센터	053-359-3730	대구 북구 노원3가 1206번지
부산광역자활센터	051-868-5866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457-10 이안빌딩 4층
인천광역자활센터	032-437-4051	인천 남동구 간석 3동 산 27-5 사회복지회관 4층
전북광역자활센터	063-226-038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0-1

지역자활센터

지역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강원	강릉	642-4100	강원도 강릉시 교1동 934-1
(033)	고성	682-9117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191
	동해	535-1648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39-1
	삼척	574-1658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97-12 (5/1)
	속초반야	636-2891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482-5 속초시사회복지회관 3층
	양양	673-4848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5-1
	영월	373-2583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6
	원주	765-0945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55-2
	인제	463-0909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 2리 381
	정선	592-4115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 827-3
	춘천	253-457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3가 67-1 시민복지회관 6층
	태백	553-8888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121-2
	평창	332-543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354-1 2층
	화천	442-0400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51-1
	횡성	345-713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54-4
경기	고양	968-83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91
(031)	광명	(02)2616-793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73-4 한솔길 22
	광주	767-0768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92-8 2층
	구리	569-1919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27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2층 A-2호
	군포	427-0555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30-2 신호빌딩 5층
	김포	983-5171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490-3 2층,지층
	남양주	595-9886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8-14 만복빌딩 4층
(032)	부천나눔	323-994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부천농협 5층
(032)	부천소사	349-2355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48-30 부천종합사회복지관 203호
(032)	부천원미	654-739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37 춘의주공상가 지하 1층
	성남	741-01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279-1
	성남만남	748-35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901-1
	수원	232-017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11-59 대명BD 3층
	수원우만	231-920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5-13 용환BD 3층
	수원희망	257-399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7-2 1층
	시흥일꾼	497-715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13-9
	시흥직은	313-2733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58-4 대양빌딩 6층
	안산	438-950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8 조강플라자 504-506
	안산양지	495-684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8
	안성	671-2077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147-7
	안양	443-159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4동 676-136
	양주	856-0221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440-12 선일프라자상가3층
	양평	775-0454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501-10 3층
	여주	881-0871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300-2
	오산	375-3322	경기도 오산시 궐동 668-2 다움빌 2층
	용인	321-80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137 3층
	의정부	879-273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427-23
	파주	949-3620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1-4 장안미래아파트상가 D-303호
	평택	658-4788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34-6 (4층)
	포천	532-1978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88 향군회관 2층
	하남	791-3660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614-1 2층
	화성	354-1129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평리 124-1
경남	거제	688-5890	경남 거제시 옥포동 660-4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층
(055)	거창	942-997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9-1
	고성	672-0972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66-9
	김해	329-6370	경남 김해시 외동 1261-3
	남해	864-6672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1
	마산	251-0650	경남 마산시 석전 2동 224-7
	마산희망	247-7045	경남 마산시 서성동 83-91 (3층)
	밀양	356-9867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54-8
	사천	855-0422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3-1
	산청	973-8267	경남 산청군 산안면 하정리 747-15
	양산	387-3147	경남 양산시 북부동 533 양산종합운동장 166-1호
	진주	747-0179	경남 진주시 평거동 399-1
	진해	540-0200	경남 진해시 풍호동 1번지 진해시종합사회복지관
	창녕	532-0624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374-4번지
	창원	262-2772	경남 창원시 두대동 145 종합운동장 149-1호
	통영	649-1649	경남 통영시 도천동 322 도천APT 상가 2층
	하동	884-6955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50-5
	함안	584-0455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49-1 함안공설운동장 220호
	함양	963-0144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1596
	합천	933-3227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524-1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1층
경북	경산	811-5444	경북 경산시 중방동 859-4 동현빌딩 2층
(054)	경주	771-6694	경북 경주시 서부동 254-8
	고령	955-8322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17-1
	구미	455-2134	경북 구미시 원평2동 45-1
	군위	383-6900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664-1
	김천	435-8985	경북 김천시 다수동 422-11 2층
	문경	554-0408	경북 문경시 점촌동 289-1 3층
	봉화	672-4185/6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66-1 2층
	상주	536-6580/1	경북 상주시 서성동 163-42 2층
	성주	931-137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33-1 성일웨딩볼관 2
	안동	841-5120	경북 안동시 율세동 419-2
	영덕	734-5884/5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64
	영주	635-5030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2-18
	영천	337-1919/01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5-10
	예천	655-8217/9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96-25 4층
	울진	781-4555	경북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27-1
	청도	371-6765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 8리 969-13
	칠곡	971-3335/6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48-2
	포항	249-0863/6	경북 포항시 북구 남빈동 413-7 선재빌딩 2층
	포항남부	252-4471/2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 1동 20-38 3층
광주	광산	941-1633/4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24-23
(062)	남구	676-5086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 2동 132
	동구	228-14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7-1 (구) 동구청 2층
	북구동신	576-697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10-1
	북구일터	524-0377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2 (2층)
	북구희망	515-551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2-1
	서구	351-3029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56-120 3층
	서구쌍촌	375-0384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 2동 1229
대구	남구	476-1991/2	대구시 남구 이천동 557-9 2층
(053)	달서	585-6612/3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191-3 이곡2동사무소 2층
	달성	639-6971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97-7 2층
	동구	986-0826/7	대구시 동구 검사동 985-4 청곡빌딩 2층
	북구	952-8592	대구시 북구 산격 1동 978
	서구	555-4848	대구시 서구 내당동 906
	수성구	767-0408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721-2
	중구	256-3083	대구시 중구 남산 4동 2482-1 까치아파트상가 104동 지하 1호
대전	대덕	628-9723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35-66 주민복지회관 2층
(042)	동구	622-8890	대전시 동구 성남2동 497-8 201호
	서구	527-1654	대전시 서구 용문동 255-66 주원빌딩 5층
	중구	221-4021	대전시 중구 대흥동 97-8 2층
부산	강서	973-6998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1549-1
(051)	금정	508-2163/4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산15
	기장	724-3457/67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75-5 우일BD 202호
	남구	638-7212	부산시 남구 문현 3동 239-83 2층
	동구	462-1466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62-9 해인빌딩 1101호
	동래	529-8932	부산시 동래구 명장 2동 508-72 동래복지관 3층
	부산진	816-9633	부산시 진구 부암3동 479-1 3층
	북구	341-9840~2	부산시 북구 구포 1동 690-3
	북구희망터	365-0045	부산시 북구 금곡동 98-1 주공2단지 내
	사상	301-8681	부산시 사상구 모라 3동 520-1
	사하	263-6697	부산시 사하구 다대 1동 1548-11 물운대입대상가 2층
	사하두송	261-0750	부산시 사하구 다대 2동 84-4
	서구	253-1957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1가 11-33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수영	757-4034/5	부산시 수영구 망미 1동 774-269
	연제	852-8219	부산시 연제구 연산 6동 2018-27 2층
	영도	403-4592	부산시 영도구 동삼 3동 1123
	중구	463-4584	부산시 중구 대청 4가 75-7 중구복지관 3층
	해운대	543-0015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2동 401-8 2층
서울	강남	445-1801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24-4 가야빌딩 402호
(02)	강동	488-4585/6	서울시 강동구 천호 2동 457-7 2층
	강북	982-1414	서울시 강북구 미아 8동 323-51 3층
	강서	2605-0610	서울시 강서구 화곡 2동 874-9
	강서등촌	3664-5920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179-1
	강서방화	2693-0624	서울시 강서구 화곡 2동 832-10
	관악	867-8381	서울시 관악구 신림 1동 1631-19 평화빌딩 5층
	관악봉천	876-6730/1	서울시 관악구 봉천 10동 890-7
	관악일터나눔	854-6581	서울시 관악구 신림 12동 1680-4 2층
	광진	499-8373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3-9
	구로	838-5660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30-94 301호
	구로실터	856-0516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09-54 여성복지회관
	금천	806-1577	서울시 금천구 시흥 2동 241-7
	노원	939-3538	서울시 노원구 상계 2동 404-7 2층
	노원남부	941-6594	서울시 노원구 월계 1동 66-7 경로당 4층
	노원북부	952-7185/6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57
	도봉	955-1317	서울시 도봉구 방학 2동 396-19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4층
	동대문	2242-7578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 1동 397-16 조흥빌딩 5층
	동작	822-7708/9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1
	마포	312-7942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40 창업복지관3층
	서대문	324-10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88-47
	성동	2299-6658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495-21
	성북	927-2420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2동 35-4 2층
	송파	416-7119	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175번지
	양천	2601-6059	서울시 양천구 신월 2동 460-11
	영등포	848-0600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2동 186-128 3층
	용산	797-5050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82-4 3,4층
	은평	307-1186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18-7 해평빌딩 3층
	종로	3673-3963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64-1 4층
	중구	754-2228/9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36-6 재영빌딩 1층
	중랑유린	436-4767	서울시 중랑구 신내 1동 574 3층
울산	남구	227-0991/2	울산시 남구 선암동 564-23
(052)	동구	235-3634	울산시 동구 방어동 183-2
	북구	291-1984~5	울산시 북구 송정동 820
	중구	281-5480	울산시 중구 반구동 593-1
	울주	238-5819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36-7 남부종합사회복지회관 별관 1층
인천	강화	934-1189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3-2
(032)	계양	543-3370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06-1 노동복지회관 3층
	남구	867-8414/5	인천시 남구 학익 1동 332-2
	남구미추홀	888-0231/2	인천시 남구 용현 5동 371-13
	남동구	422-4318	인천시 남동구 간석 3동 37-4
	동구	761-0766	인천시 동구 화수 2동 79-2
	부평	525-1982	인천시 부평구 부평 3동 284-118 2층
	부평남부	521-4561/2	인천시 부평구 부평 1동 542-69 성원빌딩 3층
	서구	569-1491~4	인천시 서구 경서동 773-3 자원봉사센터 4층
	연수	816-1995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485-2
	중구	763-1988	인천시 중구 전동 2-1 (구)인천여고 3층
전남	강진	434-7002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98-2
(061)	광양	762-9896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263-1
	곡성	363-4370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051-8 (구) 오곡초교
	나주	333-8890	전남 나주시 영산동 75-3 (구)영산동사무소
	담양	383-990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182-3
	목포	242-0003	전남 목포시 경동 1가 8-1
	무안	452-6225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79 3층
	보성	857-4664	전남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1255-1
	순천	744-3825	전남 순천시 남정동 328-8
	신안	272-6788	전남 목포시 용당 1동 1088-9 가톨릭회관 602호
	여수	662-4402	전남 여수시 공화동 1299
	여수시민	663-8378	전남 여수시 고소동 636-4
	영광	353-2000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252-4
	영암	471-9933	전남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842 (구)농공단지관리사무소
	완도	554-1001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항동리 307-5
	장성	394-0072/3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243(구) 성산복지회관
	장흥	862-8266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렬리 122
	진도	542-6900/1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080
	함평	323-9556/7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96-4
	해남	532-0043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816-1
	화순	375-4111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409-3
전북	고창	562-2014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620
(063)	군산	463-9731	전북 군산시 장미동 18-11 한국빌딩 4층
	군산한마음	446-4124/5	전북 군산시 월명동 2-1 YMCA내
	김제	544-9005	전북 김제시 신풍동 491-1 한국농촌공사 동진지사 별관 1층
	남원	632-4747	전북 남원시 동충동 199-9 사회복지종합센터 2층
	무주푸른꿈	324-2710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24-2 2층
	부안	583-0045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52-7
	순창	653-0921/2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61
	완주	232-1377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286-5
	익산	841-1040	전북 익산시 평화동 33-19
	익산원광	842-1460	전북 익산시 목천동 916-4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2층
	임실	642-4840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934-32
	장수	351-7179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67-19
	전주	283-976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4-4
	전주덕진	232-8383/4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1-1 옥성문화센터 3층
	전주생명	272-2845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600-6 YMCA3층
	정읍	533-0399	전북 정읍시 수성동 448-54 대율빌딩 3층
	진안	432-9005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768-1
제주	오름	792-8219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566
(064)	이어도	772-1297/8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15
	일터나눔	763-8219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378-1
	수눌음	722-8219	제주도 제주시 오라동 1163-4 종합경기장아구장 2층
충남	공주	857-0029	충남 공주시 신기동 725
(041)	금산	752-7942	충남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315-3
	논산	734-1377/8	충남 논산시 취암동 372-98 2층
	당진	355-2882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118 새마을회관 204호
	보령	936-8509	충남 보령시 동대동 1462 3호
	부여	832-0811/2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0-6 3층
	서산	668-2304/5	충남 서산시 석림동 642-9 남경타운 C동
	서천	953-2091/2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858-3 동서빌딩 201
	아산	546-1814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1-9
	연기	868-1004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298
	예산	332-5402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202
	천안	552-0350	충남 천안시 원성동 237-10
	청양	942-4526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65
	태안	674-1378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64-16 3층
	홍성	631-5815/6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726번지 보훈회관 1층
충북	괴산	832-1008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56-1
(043)	단양	421-6911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632
	보은	543-2033	충북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408-1
	영동	745-8481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67-19
	옥천	731-1549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 옥천다목적회관
	음성	872-8868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67-3 상수도사업소 후관
	제천	648-2983	충북 제천시 하소동 345
	증평	838-3906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495-1
	진천	533-5981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 4리 471-132
	청원	269-5720/1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688
	청주	288-1432/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206-1
	충주	855-2800	충북 충주시 교현 2동 360-12

●편집실에서

중앙자활센터 〈자활읽기〉는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자활사업과 관련 있는 주제라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종사자의 현장 이야기, 참여자 성공사례, 자활 포토에세이, 전문가 칼럼 등을 자유로운 필체로 담아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팀 〈자활읽기〉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140-875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10-1 신원빌딩 7층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팀 〈자활읽기〉 담당자 앞
E-mail hj_im@cssf.or.kr 전화 02-3415-6933 팩스 02-3415-6990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